

한국 고령층의 인적(人的) 안전망 약화와 잠재적 리스크

- 한국 고령층의 노후 생활 부담의 정도가 심각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.
- 한국 고령가구의 일반적인 형태는 1~2인가구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함.
 -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1~2인 가구의 비율이 60.6%에 달함.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80세 이상의 경우 동비율이 83%에 달함.(2015년 인구주택총조사)
- 고령가구의 일반적인 거주형태가 단독, 부부동반 거주라고 할 때 이들의 삶이 건강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육체적·정신적 기능 약화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.
- 과거 가족 중심의 한국 문화가 어느 정도 이를 보완했다고 볼 수 있음. 하지만 경제적, 정서적 자녀들의 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완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.
- 현재 노인돌봄서비스,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. 하지만 정책대상이 협소하여 고령가구 전반의 안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함.
- 고령가구들이 자신들의 집과,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적극적 준비가 필요함.

-
- 작성자: 고제현 연구위원 (051-663-8174 / thehp@hf.go.kr)
 -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
-

1 논의 배경

- 한국 고령층의 노후 생활 부담의 정도가 심각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.
 -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고령층의 소득 안정성 취약임.
 -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공적연금이 고령층 소득의 근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연금, 금융자산 보유 여력도 미흡한 실정임.
 - 공적연금 지급률이 38.7%(2014년 기준)이며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은 33만 7000원(2015년 12월 기준)으로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61만 7000원의 54% 수준임.
 - 고령층의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의 경우 60대 13.6%, 70세 이상 2.6%에 불과함¹⁾.
 - 금융자산규모를 살펴보면 60세이상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이 6,502만원인데 반하여, 30대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9,206만원 임.(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)
 - 한편 핵가족화 진전 등으로 부모 자녀간의 유대가 약해지며 인적 안전망의 기능도 점점 약화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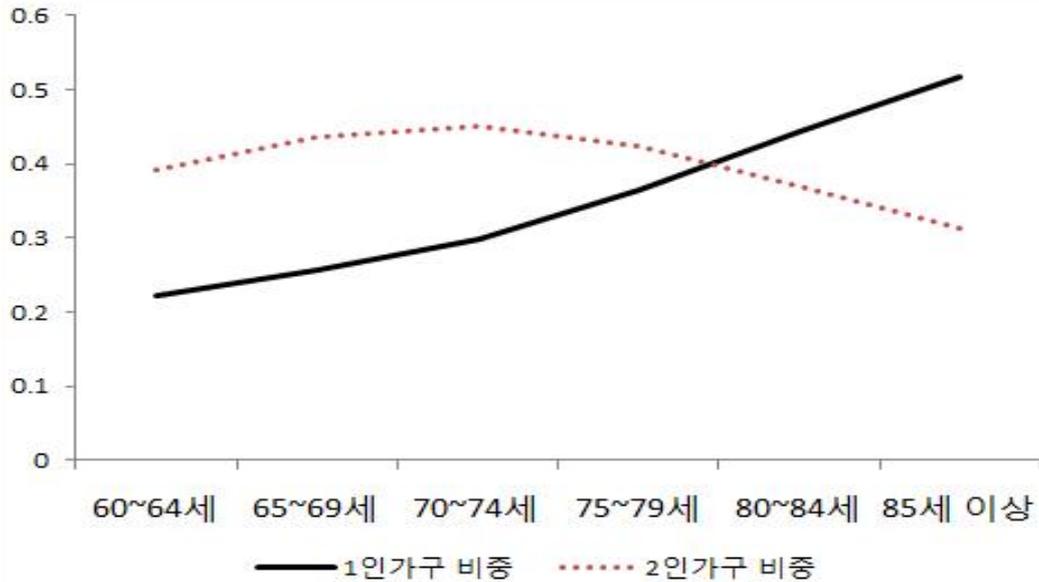
2 고령 가구 형태

- 한국 고령가구의 가구원수를 통해 가구 형태를 살펴 볼 수 있음.
 - 한국 고령가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부부만이 거주하는 2인 가구 형태임. 단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여 80대 이후 부부가구보다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짐.

1) 보험개발원, '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 현황 분석'

-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1~2인 가구의 비율이 60.6%에 달함.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80세 이상의 경우 동비율이 83%에 달함.(2015년 인구주택총조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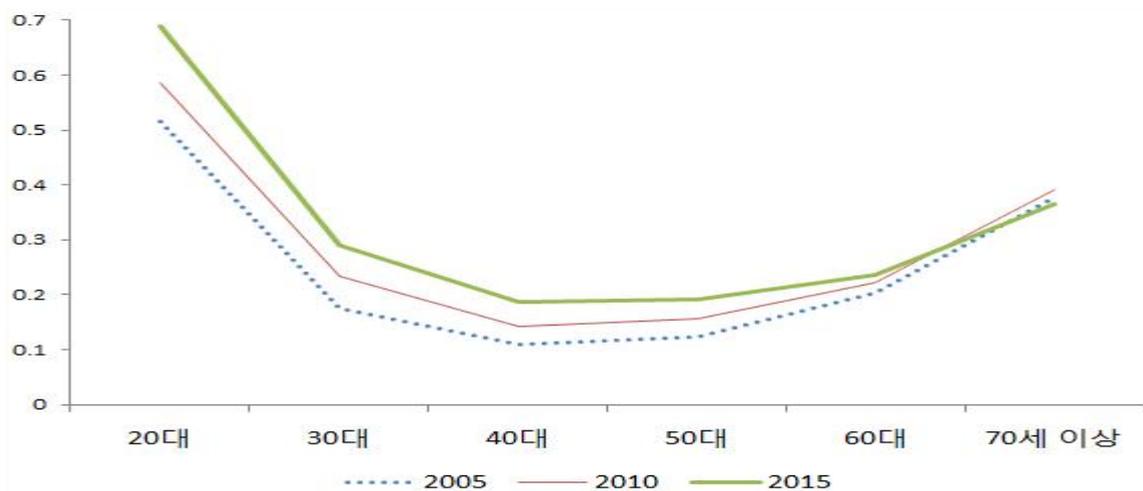
[그림1] 고령가구 연령별 1인가구 및 2인 가구 비중



※ 자료 : 인구주택총조사(2015)

- 단, 연령별 1인 가구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, 2,30대 1인 가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고령가구의 1인 가구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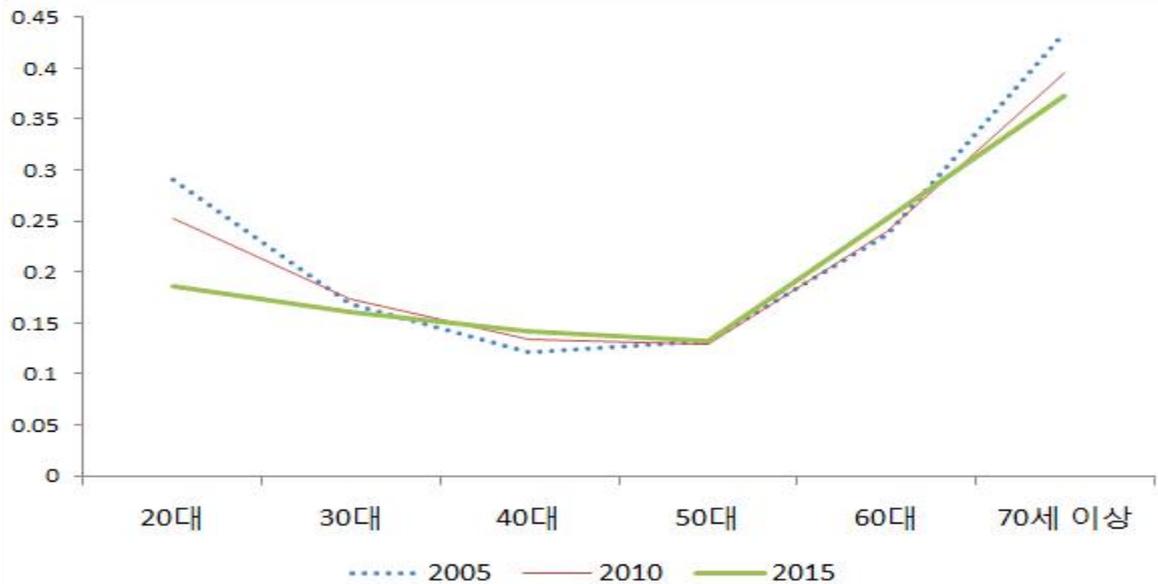
[그림2] 연령별 1인 가구 비중 추이



※ 자료 : 인구주택총조사(2005,2010,2015)

- 연령별 2인 가구 추이를 보면, 청년층과 70세 이상 연령 가구의 2인 가구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.
- 이는 청년들 취업과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까닭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.

[그림3] 연령별 2인 가구 비중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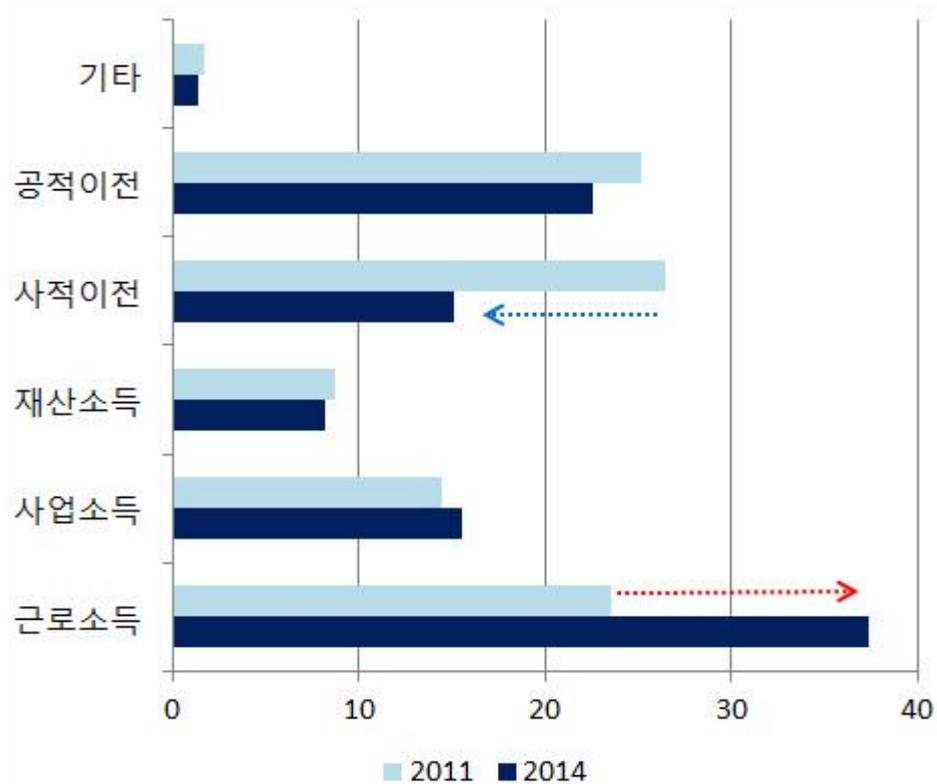
※ 자료 : 인구주택총조사(2005,2010,2015)

- 연령이 증가할수록 육체적·신체적 제약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부부나 독거 가구 형태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임.

3 자녀들의 경제적·정서적 부양

- 고령가구의 소득 원천에 있어서도 자녀 및 친인척들의 지원에 의존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.
- 노인실태조사에 따를 때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소득 원천 중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6.5%에서 2014년 15.1%로 감소함.
- 반면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3.5%에서 37.4%로 증가함.

[그림4] 65세 이상 고령층 소득 원천별 구성비(2011년,2014년)



※ 자료 : 노인실태조사

□ 정서적 측면에 있어서도 고령층들이 체감하는 지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짐.

- 노인실태조사에 따를 때, 비동거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고령층이 못받는 고령층보다 많이 있음.
- 하지만 2011년 대비 자식들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고령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.

[표1] 비동거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여부 응답자 비중

	매우 그렇다	그런 편이다	그렇지 않은 편이다	전혀 그렇지 않다.
2011년	11.4	58.8	22.3	7.6
2014년	7.5	57	22.9	12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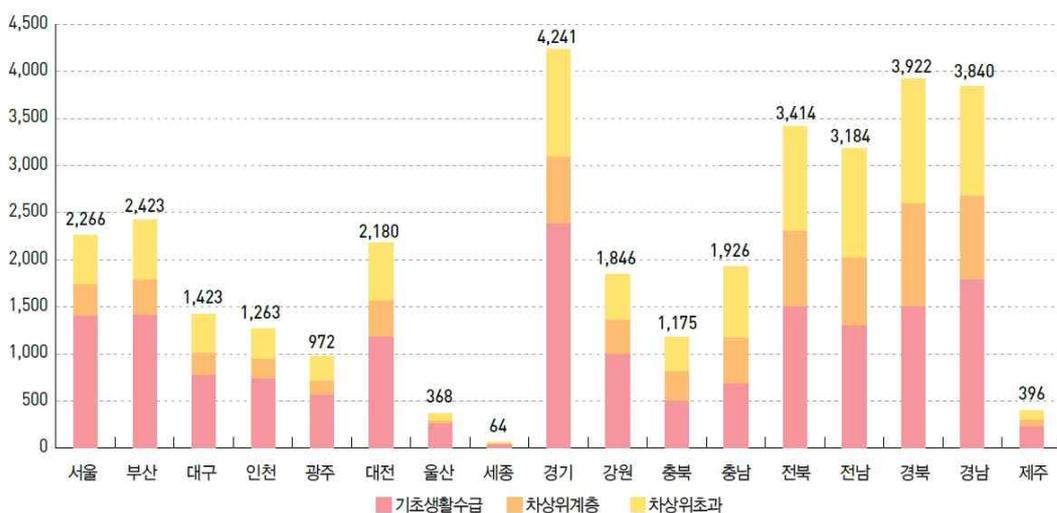
※ 자료 : 노인실태조사

4 고령가구 형태 변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

- 고령 단독 가구와 부부가구들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거주에 있어 물리적, 정서적 어려움이 발생함.
 - 거동 불편으로 인한 이동의 제약,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다양한 사고 노출, 만성 질병 및 응급 상황에 대비한 건강관리 시스템 등이 고려 되어 함.
 - 또한 정서적 측면에 있어서 고립감, 외로움 등의 어려움이 점차 사회 문제로 부각될 것임.

- 현재 노인돌봄서비스,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. 하지만 정책대상이 협소하여 고령가구 전반의 안전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함.
 - 노인 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함.
 - 노인 돌봄서비스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된 대상으로 2015년 1월 전국 기준 34,647명이 이용하고 있음.

[그림5] 시도별 · 유형별 노인돌봄서비스이용자수('14.12월 기준)



※ 자료 : 사회보장정보원

5 결론 및 시사점

- 고령가구의 일반적인 거주형태가 단독, 부부동반 거주라고 할 때 이들의 삶이 건강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육체적·정신적 기능 약화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.
- 과거 가족 중심의 한국 문화가 어느 정도 이를 보완했다고 볼 수 있음. 하지만 경제적, 정서적 자녀들의 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완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.
- 현재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, 생활교육, 가사지원, 활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, 영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가사 및 간병 등의 재가 서비스 등이 존재하고 있음.
-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지원이 필요한 고령가구는 급증할 것으로 보여, 이에 대한 직접적 지원만으로는 이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됨.
- 고령가구들이 자신들의 집과,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적극적 준비가 필요함.
 - 선진국들의 정책이 고령 친화적 주택 건설, 재가 요양이 가능한 구조로 개조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화되는 배경도 이와 같음.
 - 일본은 고령층이 주택을 무장애* 주택으로 개조 시 용자확대 및 소득세 및 고정자산세 등 세제감면 혜택 지원

※ 무장애주택은 화장실 및 욕실에 난간 설치, 주택 내 계단 제거,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복도 폭 확보 등 고령자가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주택